

Michel Chossudovsky, 빈곤의 세계화: 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오 세 철**

금융·외환위기로 표상화되었던 IMF관리체제의 위기는 외환보유고의 확보라는 극히 피상적인 청신호를 내세우면서 낙관론을 유포시키고 반민중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자유주의 전략하에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 실업자가 4백만을 넘어서고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구조가 심화되면서 전민중을 빈민화시킬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를 포함한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뿌리를 뽑는 무한경쟁의 논리가 삶 전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자본의 위기로 시작된 공황의 위기가 오히려 민중의 위기로 전이되는 역사적 변혁의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본의 위기의 본질에 대하여 진보학계에서는 그동안 과잉축적으로 인한 공황론, 한국자본축적구조에 기인한 차별책임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초국적자본의 책임론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보편·특수의 논쟁구도 속에서 어느정도 정리되어가고 있다. 즉 자본주의 보편의 모순문제(그것이 과잉축적으로 표현됐건, 생산의 과잉으로 표현됐건) 즉 세계자본주의 일반모순의 전세계적 관철을 중심에 놓고 한국자본주의 특수한 경향에까지 일반경향이 관철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국자본주의 축적체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을 중심에 놓고 자본주의 일반모순을 상대적으로 부차화시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특수성의 지나친 강조는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보편성을 중심에 놓으면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한국자본주의 구조와의 맞물림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특수성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초국적자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이러한 논쟁구도와 짜맞추기는 어렵다. 이는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일방적 결정론으로 보는 시각인데 특수성의 문제도 민족주의와의 대립구도로 보는 또하나의 관점이다. 신제국주의 음모론과도 연결되는 이러한 해석은 일면 타당성을 갖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관철되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일반의 전략을 부차화시키거나 지역과 국가의 특수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는 순환적 위기로서의 공황과 구조적 위기로서의 노자대립을 과학기술혁명과 노동통제전략으로 극복해오고 있으나 1970년대초의 공황이후 노동자투쟁의 성과로 얻어진 복지

* 미셸 초스도프스키, 서울 : 당대, 1998.(이대훈 옮김)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를 포기하는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로 자본의 재편과 노동에 대한 유연화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민영화, 자율화, 탈규제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빈곤의 세계화를 향한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세기말적 공황의 위기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IMF 관리체제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빈곤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빈곤의 세계화』를 쓴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학 및 국제발전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유럽의 연구기관들에서도 강의하고, 제 3세계정부의 경제자문 및 국제기구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 3세계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국가 및 경제구조조정 사례”를 조사·연구중이다. 저서로는 *Global Poverty and New World Economic Order. The Third World Network*(근간)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The New Vietnam War”(Third World Resurgence, 1994), “L’art de gérer l’exclusion au Brésil”(Le Monde diplomatique, 1994)의 다수가 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세계경제의 위기를 1930년대의 위기와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면서 현재의 위기는 부유한 나라들이 과거 그들의 식민지를 더욱 쉽게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면서 현대의 빈곤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업과 전세계적인 노동비용 최소화를 기반으로 한 범세계적 파잉생산체제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기술적 해결책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인 사회투쟁만으로 가능하고 그 관건은 금융자산의 엄청난 집중과 실물자원의 소수지배문제를 푸는데 있다고 본다. 다양한 세력과 사회운동이 이러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세계적으로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며 빈곤퇴치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전세계 주요지역의 사회운동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창하고 있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세계적 빈곤과 거시경제적 개혁으로 제1장 빈곤의 세계화, 제2장 차관조건을 통한 국가정책의 지배, 제3장 세계 저임금노동 경제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는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로, 제4장 소말리아 기근의 진정한 원인, 제5장 르완다의 경제적 학살로 짜여져 있고 제3부는 남아시아와 남동부 아시아로 제6장 인도 : IMF 간접통치, 제7장 방글라데시 : 원조 컨소시엄의 신탁통치, 제8장 베트남의 전후경제파괴로 구성되었으며 제4부 라틴아메리카에는 제9장 외채와 ‘민주주의’의 나라 브라질, 제10장 페루 : IMF의 충격요법, 제11장 볼리비아 : 외채와 마약밀매경제로 짜여져 있고 마지막 제5부에는 제12장 러시아연방의 제3세계화, 제13장 유고연방의 체제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신식민지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그는 세계적 빈곤의 원인을 왜곡하는 경제이데올로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저지하는 경제과학의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고도의 도덕적·윤리적 담론을 함축한 역패러다

임을 창출해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역패러다임은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한편으로 빈곤문제라든가 환경보호,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관계된 정책적 이슈를 왜곡하고 '진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정책의 각종 처방에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대항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의 공식적 도그마에 반대한다기보다 오히려 그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차관조건을 통한 국가정책의 지배를 분석하면서 IMF와 세계은행 간의 역할분담을 설명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안정화조치가 시행된 뒤 필수적 구조개혁이 뒤따르는데 이는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과 부문별 구조조정차관의 지원을 받아 실행된다. 이러한 조치들도 무역자유화, 은행부분의 탈규제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세개혁, 토지독점화, '빈곤퇴치', '올바른 정치'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조치는 개도국들이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쌓아올린 투쟁의 결과물을 무효화시키고 과거의 진보의 성과를 '종이한장'으로 뒤엎어버리는 식으로 부자비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와해시킨다(76쪽)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개혁조치는 경제적·사회적 붕괴를 향한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긴축은 국가의 해체로 이어지며, 외국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은 소득감소로 파괴되고 내국생산은 세계시장체제로 재편된다. 제3장에서는 거시경제적 개혁이 세계적 차원에서 임금과 노동비용을 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경제체제가 저임금 노동력을 발판으로 성장함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불로소득경제가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제3세계 제조업분야의 이윤을 빨아먹고 성장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과학기술혁명은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통제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고 저임노동 생산기지가 하청기업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어서 노동비용을 세계적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은 고임금국가의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또 그곳의 생산설비를 저임금국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점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을 매우 낮은 임금으로 더욱더 장시간 노동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제4장부터 제13장까지는 바로 위와같은 세계경제체제의 지배전략이 IMF관리체제를 겪게 된 나라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활을 파괴화시키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독자들의 몫이다. 꼼꼼히 읽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국가는 그의 다음 저서에 포함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제3세계를 포함한 세계각국의 민중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투쟁했을 때만이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이 책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미시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경영학도에게는 이 책이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